

[2025-03] 즉시 보도	배포일	2025.07.21.(월)
	문 의	담당자 이자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Mobile .010-7685-0559 Tel. 02-765-7500 / E-mail. stheater@stheater.or.kr
	사진 등	www.webhard.co.kr (ID assitej1 PW 1004) 2025 보조금법 개정
	첨 부	① 대표발표1(박혜선) ②대표발표2(선명주) ③대표발표3(선옥현)

- ❖ **보조금법 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기자회견(7.21.11시 20분)가져**
- ❖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기초예술계의 우려**
- ❖ **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법의 개정 및 특별 제정의 필요성 강력히 요구**

-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34인은 지난 7월 1일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키고, 7월 14일 오전 12시 1,240명이 연대 서명한 가운데 현 정부를 향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호소하며 7월 15일자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7월 20일 18시_1,426명)
- 현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른 기초예술계의 높은 우려는 보조금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맞물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보조금법의 시행이 예술계의 현장성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기초 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는 억측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 더욱이, 국가 경제가 위태로울수록 제일 먼저 외면되는 기초예술은, 어제오늘의 위기가 아닌 만큼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추진위원회는 김재원 의원실 주관으로 2025년 7월 21일 11시 20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9명의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표발표(3인) : 박혜선(극단 사개탐사 대표), 선명주(극단 뱃속의 나비 대표), 선옥현(극작가)
 - 참석자(6인) : 남정숙(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의(서울연극협회 회장), 방지영(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안희철(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이썬정석(민예총 사무국장),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 당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던 90여명의 예술인들은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며, 보조금법 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 예술인들은 계속해서 문제사례들을 SNS 등을 통해 노출하며 호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이하 발표문

첨부1 : 【 대표 발표문 1 】

기자회견에 앞서

박정의 (서울연극협회 회장)

-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인들은 지난 7월 1일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34명)'를 발족시켰고, 지난 7월 20일 17시 1,426명이 연대 서명한 가운데,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특별 보조금법 제정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박혜선(극단 사개탐사 대표)

-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한국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 5년에 걸쳐 진행된 이 결과는, 보조금법에서 예술분야와는 맞지 않은 일괄된 항목들과 변경불가의 파행 등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사례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인들은 예술의 특징점과 상관없이 여타 '산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보조금법 시행으로 파국을 맞는 극작가협회의 존폐위기를 막는 것은 물론,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규제로 더 이상의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고자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초예술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에, 지금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그 반석 위에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 현재 기초예술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가진 문체부 장관이 지명된 가운데, 현장은 더욱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술의 복잡한 생태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술은 '산업'이 아닙니다.
- 기초과학과 기초수학의 부재 우려에 이은, 기초예술이 부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 기초예술을 향한 보조금법의 맹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연주했던 연주자의 마음으로, 저희는 국민을 위해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누적된 보조금법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초예술의 복잡한 생태계를 인지하십시오,

보조금법을 개정하라,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제정하라!

첨부2 : 【 대표 발표문 2 】

창작 활동의 현장

선명주(극단 뱃속의 나비 대표)

○ 예술인들은 지난 수년 동안, 보조금을 창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여기고, 비현실적인 최소의 예산 속에도 몸을 맞추며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 그러나 저는 예술혼을 불태우기에 앞서, 현행 보조금법을 처음 마주하고 장장 6개월을 머리를 부여잡고 싸워야 했습니다.

○ 출연비를 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할지, 연습비를 어떻게 출퇴근 명부로 정산할지, 고용보험은 원지, 산재보험은 원지, 그러다 예술인 단기 고용보험을 들지 못해서 몇 십 만원을 다시 뱉어내야 했던 일도 생기며, 하나부터 열까지 끝없는 좌충우돌을 겪었습니다. 매번 수없이 담당자와 항목 조정에 관해 논의 해 왔습니다.

○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무엇이 예술 창작 현실에 안 맞는가,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조금은 일정 항목의 예산은 필수 집행 비율을 채워야 하며, 그에 맞춰 정산하기 좋은 방식을 하자면, 모든 무대, 소품, 의상 등등을 기성품 중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잣대가 실제 예술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오히려 시스템 왜곡이 더욱 만연해질 뿐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듯, 보완만 강화되는 창작지원의 탈을 쓴 보조금법의 횡포를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 비현실적인 보조금 관리 방식은 급기야 예술 창작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누적된 보조금법의 문제를 이 정부에서만끔은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주권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창작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불법을 막고자 예술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아 주십시오!

첨부3 : 【 대표 발표문 3 】

선욱현(극작가)

((사)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과
(사)한국극작가협회를 구제해 주십시오.

‘(사)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보조금법 위반’ 재판은 2020년 국가권익위에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시기를 특정하여(5대 집행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신고했습니다. 배임, 횡령을 의심했지만 모든 수사 과정에서 배임, 횡령은 단 한 푼도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간 협회를 위해 무급으로 봉사했고 예술가로서의 양심과 신념을 지켜온 4인은 결국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사)한국극작가협회(이하 협회)는 1997년부터 국내 유일의 희곡지 ‘한국희곡’을 출간해 왔습니다. 2025년 봄호 97호를 끝으로 멈춰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이었던 ‘한국희곡’은 책을 출간하는 사업임에도 원고료만 쓰고, 책 인쇄비 즉 출간비를 쓰지 못하게 항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책을 출간하는데 출판 인쇄비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술위에 지속적으로 항목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호소 했지만, 무시됐습니다. 한국희곡은 계간지이고 1년에 4번, 총 2천 권 이상 출간해야 합니다. 호당 300만원(세금 포함)씩 1년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원금은 편집위원들에게 원고료로 지급하여, 사업 완료 승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과정에서 열악한 협회 사정을 알고 원고료를 받은 편집위원들이 기부한 그 금액을 재판에서는 기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목 유용’ 즉 원고료를 출판 인쇄비로 썼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검사 측 주장인 ‘처음부터 출판 비용으로 쓸 마음먹었다’는 추정의 언어로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혐의를 지목하며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증거 없음으로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가 된 겁니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극작가단체인 한국극작가협회는 유죄 확정으로 인한 환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해체해야 되는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체로 끝이 아니고, 유지 자체도 힘들었던 협회를 일으켜 세운 5대 이사장 외 3인에게 협회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참담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강국을 외치는 2025년에 벌어진 이 통탄할 일을 어디다 얘기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편집위원을 하고 그 돈에서 한국희곡의 명맥을 유지하려 기부하여 진행했는데, 그 기부금이 법정에서 '보조금 유용'으로 둔갑한다면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닌 언제라도 사업 담당자와 임원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올가미인 것입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그건 예술가들에게 협회에겐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한국의 기초예술가들을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외면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문화예술강국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의 불합리로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5대 이사장 외 3인과 (사)한국극작가협회에 대해 국가가 즉시 나서 구제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사) 한국극작가협회